

'Inclusive Korea'
Conference
2018.5.25

한국형 뉴딜의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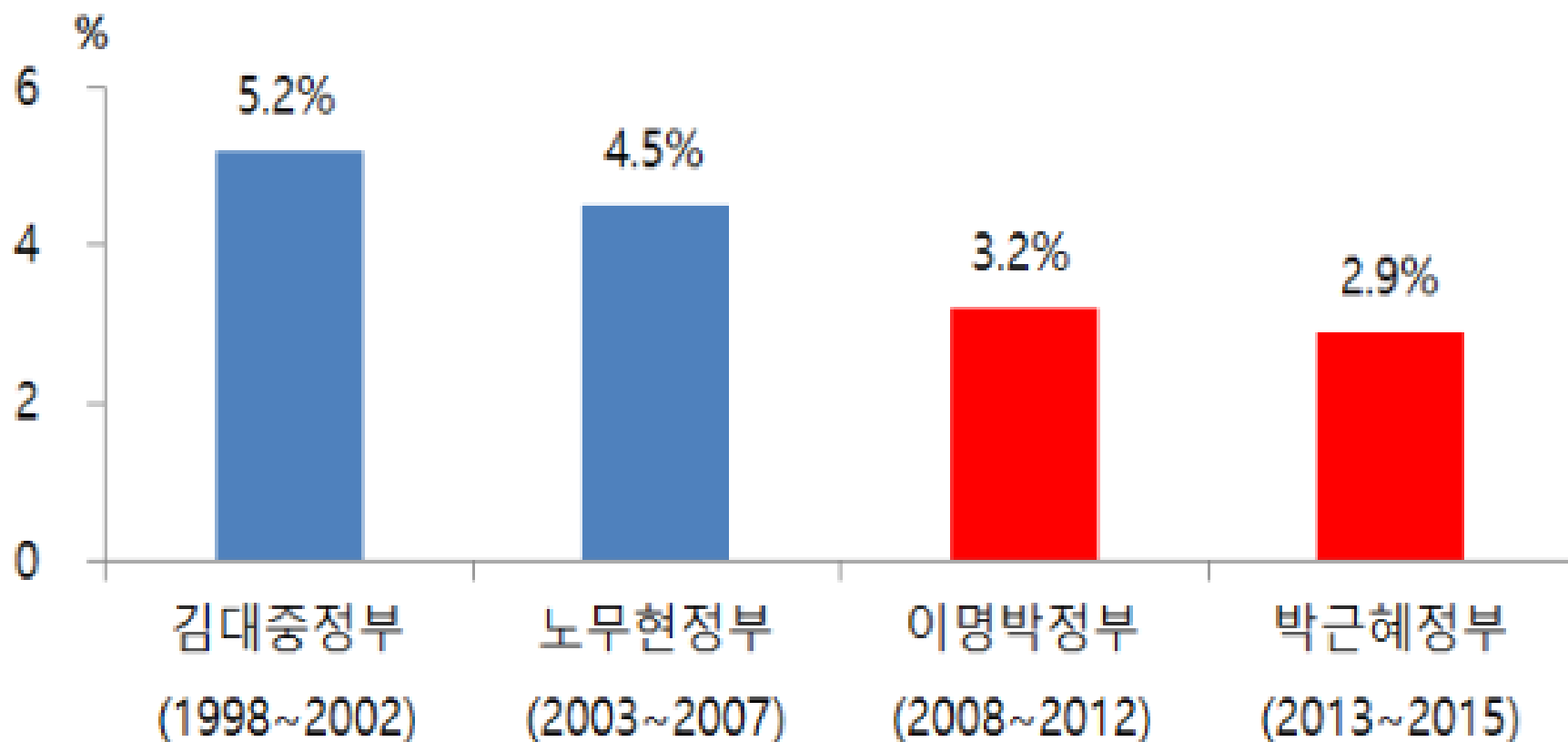
Towards a Korean New Deal

이정우(경북대, 경제학)

목차

1. 문제의 발단: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 양극화
2. 한국경제 패러다임
성장지상주의(1960'-)+시장만능주의(1997-)
3. 대안을 찾아서
북유럽, 미국의 New Deal,
자본주의 황금기(Golden Age of Capitalism)
4. 결론: 포용적 성장 = 경제민주화 + 복지국가
한국형 뉴딜이 필요.

역대 정부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2010년 기준(연쇄가격, 2008 S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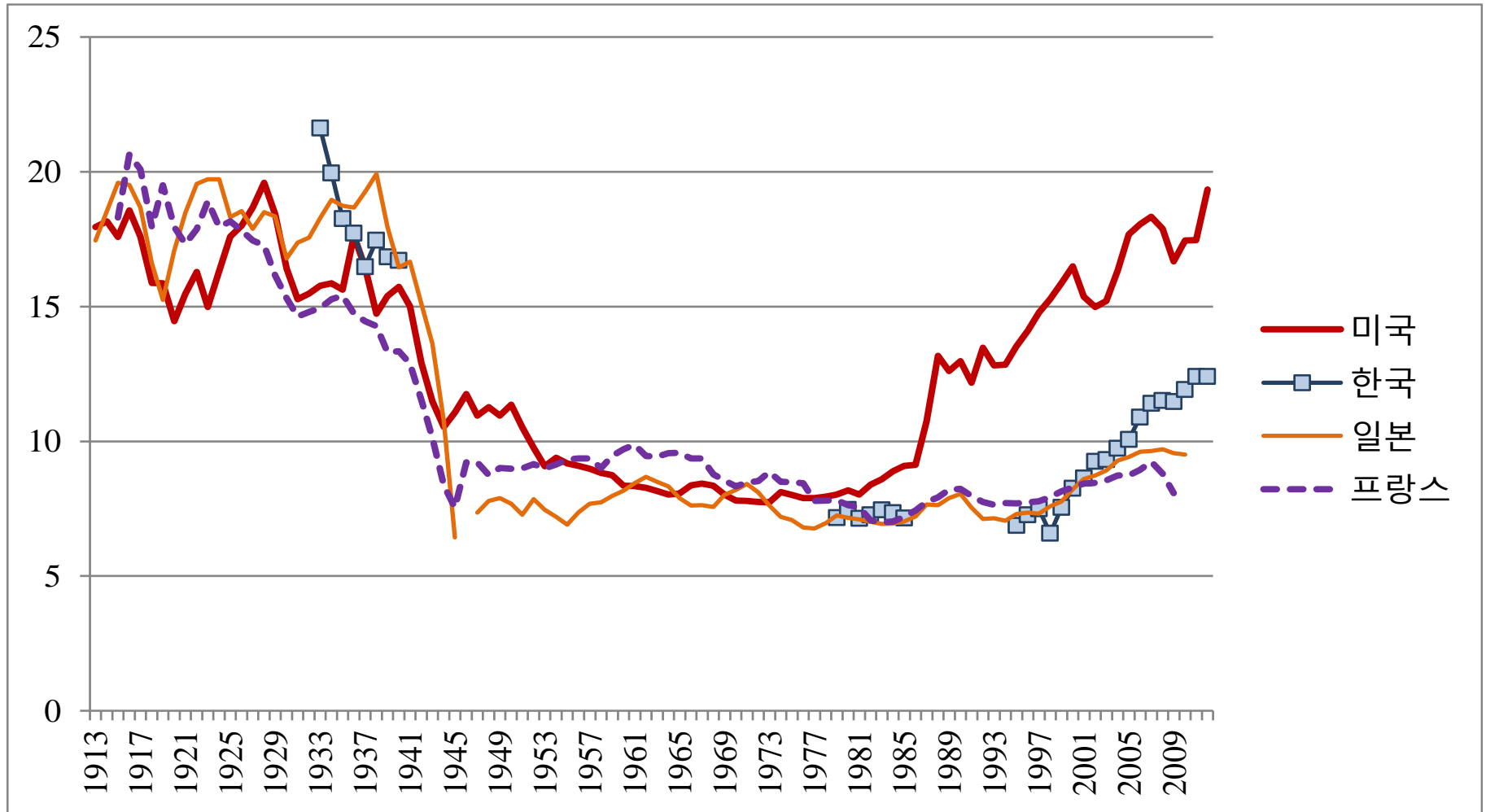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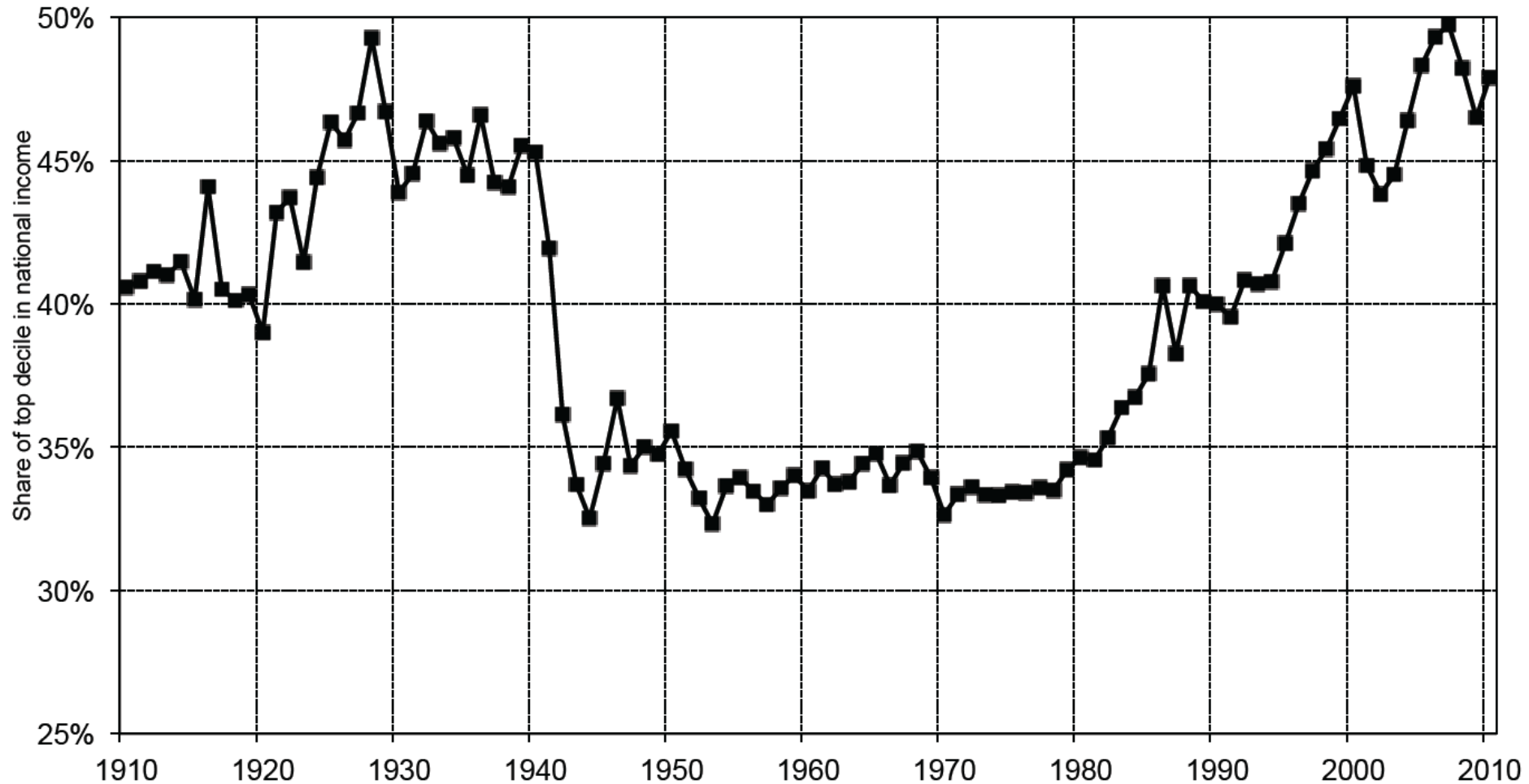


Figure I.1.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0-2010



The top decile share in U.S. national income dropped from 45-50% in the 1910s-1920s to less than 35% in the 1950s (this is the fall documented by Kuznets); it then rose from less than 35% in the 1970s to 45-50% in the 2000s-2010s. Sources and series: see piketty.pse.ens.fr/capital21c.

미국, 1920년대와 현재

‘광란의 20년대’(The Roaring Twenties)

Harding, Coolidge, Hoover(Andrew Mellon) 정책

= 부자감세 + 작은 정부 + 규제완화 + 친기업 + 반노조

-> 양극화 + 1929년 대공황

-> 루즈벨트의 뉴딜 = 3R, 개혁 (특히 1935, 제2 뉴딜)

제2 뉴딜 = 규제의 제도화 + 복지의 제도화 = 抑强扶弱

• Social Security Act, Wagner Act, 누진세 강화

1980년대 이후 미국은 1920년대와 판박이

레이건, 부시, 부시의 5대 도그마

-> 양극화 + 2008 경제위기

-> Obama 개혁 실종 -> 2016 Trump의 승리

노동을 중시한 대통령

- 에이브라함 링컨
- “노동은 자본에 선행하며 독립적이다. 자본은 노동의 아들이며, 노동 없이는 애당초 존재조차 않을 것이다. 노동은 자본보다 우위이며, 더 우대받을 자격이 있다.”
- 프랭클린 루즈벨트, “내가 노동자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노조 가입이다.”

국가의 3대 경제기능

1. 성장: 한국은 성장지상주의 국가
2. 안정
3. 분배(재분배)

1. 박정희 1만 강조, 2, 3 무시. 극심한 불균형.
2. 전두환 정부의 김재익 경제수석 2를 강조.
3. 노무현 정부 3을 강조 -> 균형 회복 시작.
그러나 균형을 갖추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1997 외환위기 이후

- 시장만능주의 Market Fundamentalism
작은 정부, 규제완화가 시대적 화두(그러나 한국, 세계은행 'Doing Business' 4위)
- 정부 규모(세수/국민소득) 참여정부 때 21% 도달한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18%로 축소
- 최근 세수 호조로 20% 회복.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음.

IV

한국의 저복지 : 복지기피국가와 토건국가의 결합

복지기피국가 미국의 특징

- ① 낮은 사회지출 수준
- ②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
- ③ 복지제도의 일관성 부족
- ④ 높은 본인 부담
- ⑤ 엄격한 수혜조건
- ⑥ 소외집단이 많고, 열악한 환경
- ⑦ 세금 대신 조세감면 방식(tax expenditure)
- ⑧ 지역간 편차가 크다

한국의 어려움

복지기피국가 미국과 토건국가 일본의 혼합

1. 복지기피국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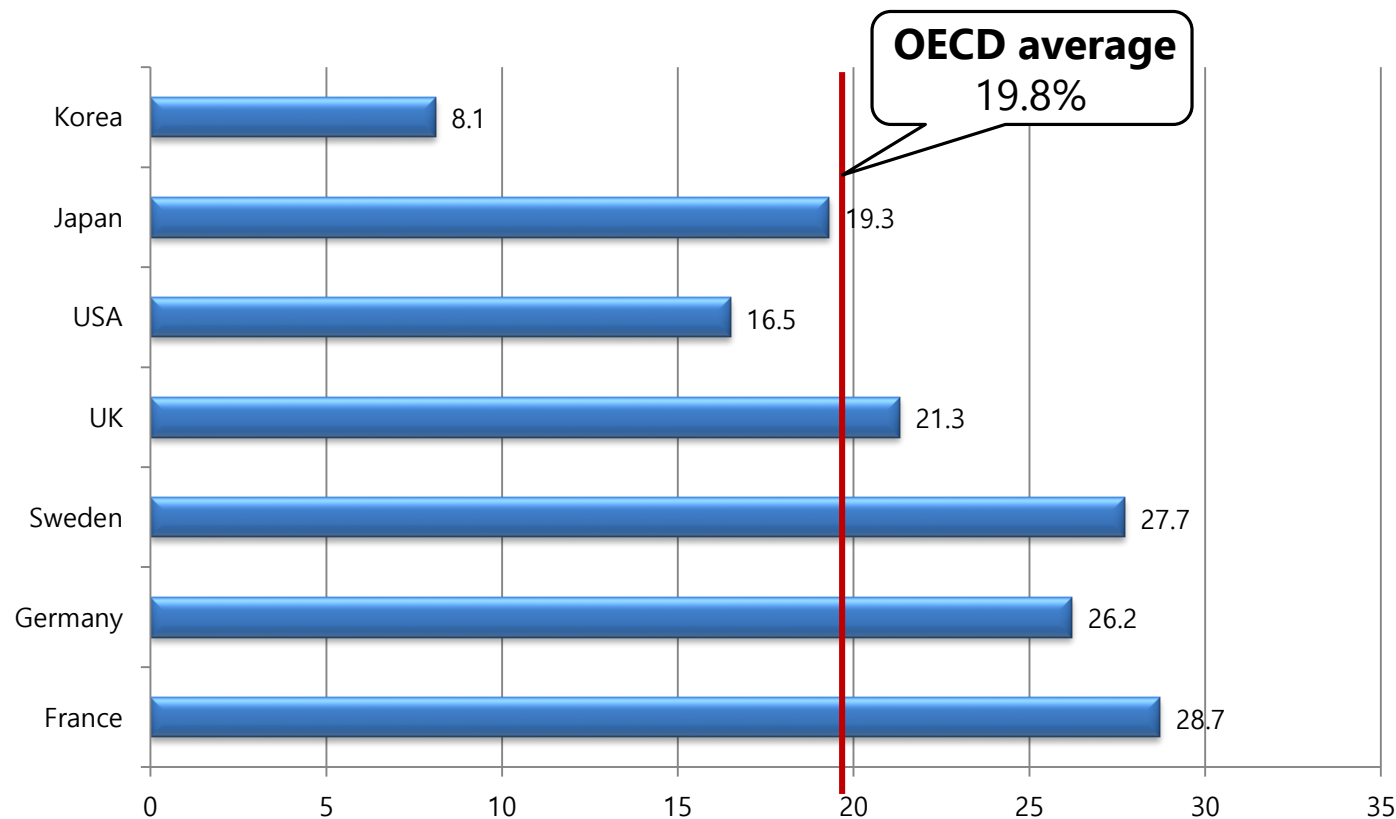
- 사회지출 수준이 낮음
- 선별주의가 발달
- 정책 일관성 부족, 가변적
- 본인 부담이 높음
- 엄격한 조건
- 소외집단 많고, 열악한 환경
- 복지정책의 상당 부분이 조세감면의 방식을 취함
- 복지제도 지역 편차가 큼

2. 토건국가 일본

- 통제경제, 관치경제
- 일본 신용등급 강등
 -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 '격차사회'논쟁
 - 지니계수: 1972년 0.314에서 2002년 0.381로 급상승
- 자민당 정권의 시장만능
- 주의로 불평등 심화
- 한국의 박정희 모델

Growth vs Distribution Deb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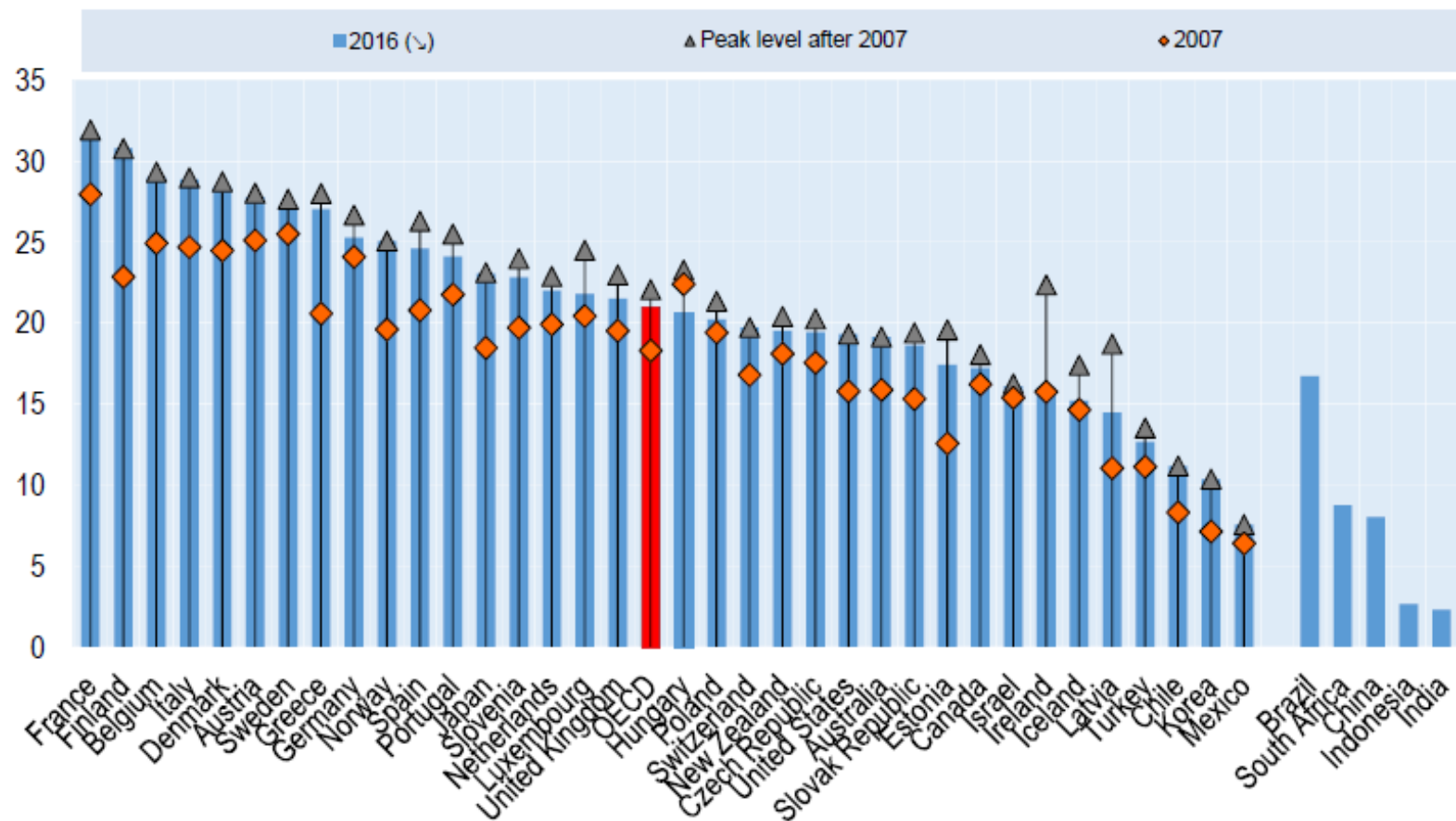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Social Expenditures



Sources: OECD(2011), Social Expenditure-Aggregated data, stats.oecd.org.

Note: Social expenditure means public expenditure plus mandatory private expenditure on social i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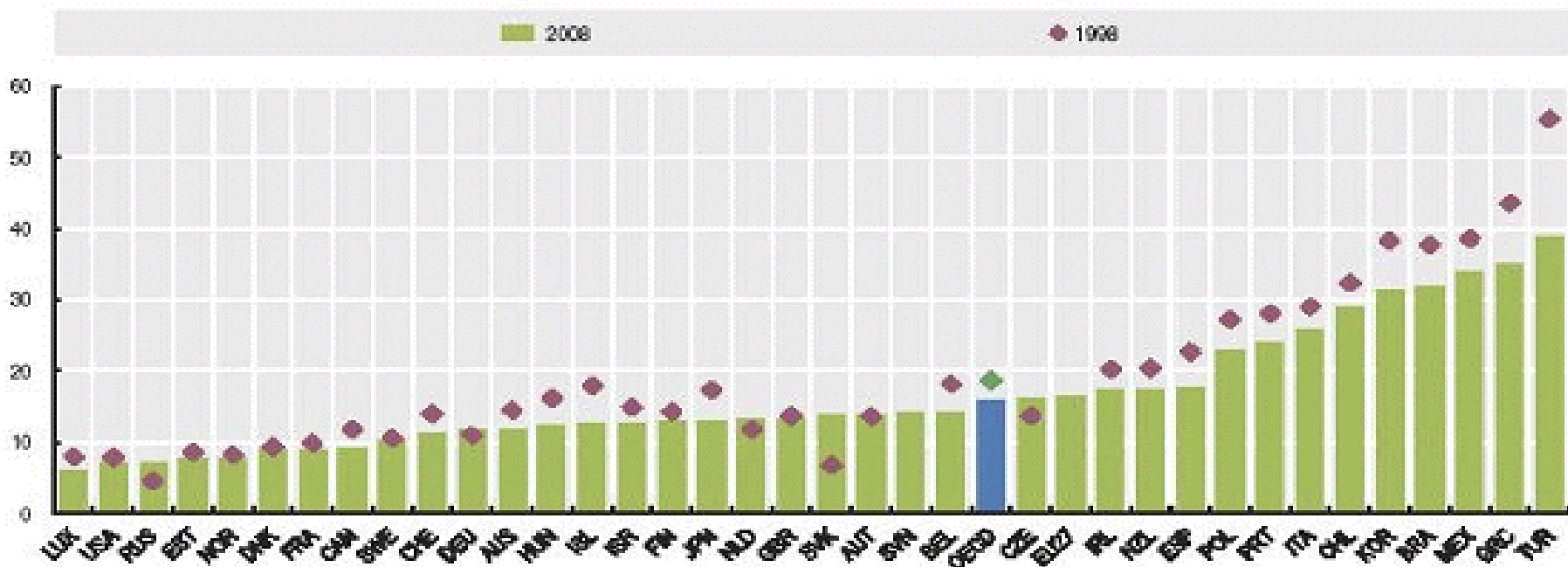
Public Social Spending out of GDP



Source: OECD



<그림 3, 표 7> 총고용에서 자영업종사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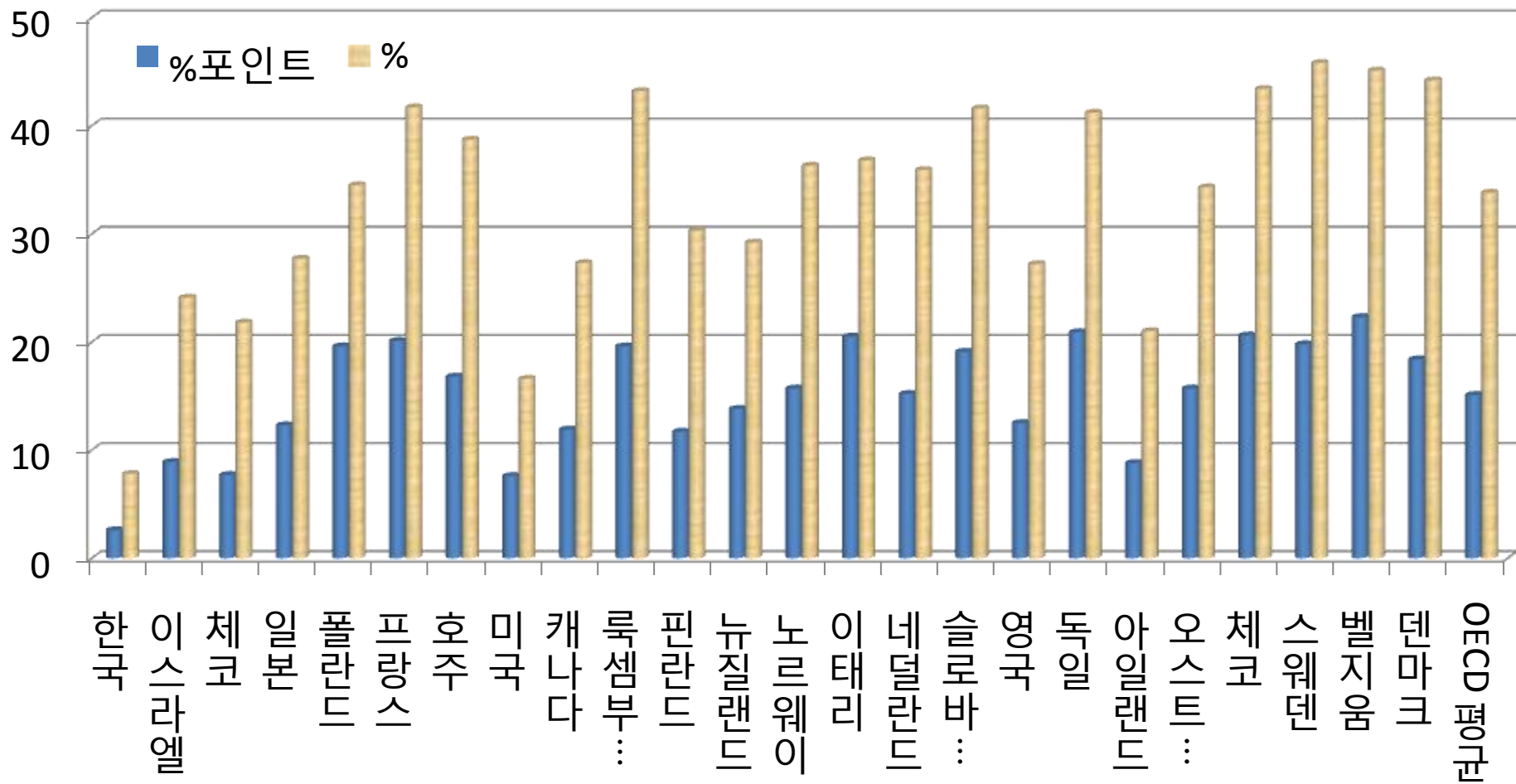


자료: OECD Factbook 2010, 135pp

연도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한국	37.1	36.7	38.3	36.8	36.0	34.0	32.8	31.3
OECD평균	19.8	19.2	18.6	17.6	17.3	17.3	16.4	15.8

원자료 : OECD Factbook 2010: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표 1> OECD 각국의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지니계수 축소 비율(시장소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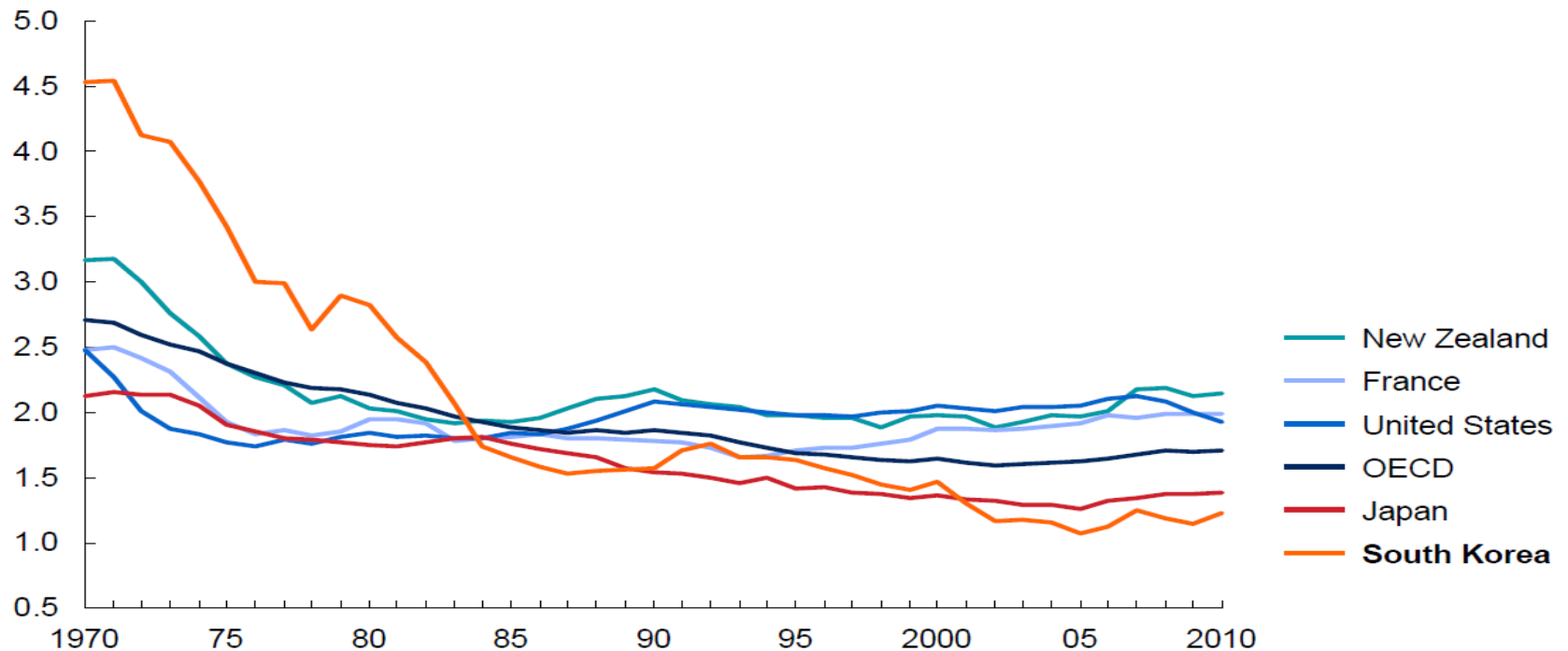


자료: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2008

세계 각국의 출산율 추이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3)

Total fertility rate¹



1 Number of children a woman would bear if she experienced, at each age, the current period age-specific fertility rates (and she survived to the end of her child-bearing years, ages 15–49).

SOURCE: Eurostat New Cronos Database; Statistics Korea;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McKinsey Global Institute analysis

4. 저출산, 고령화와 복지국가

- 한국의 합계출산율 = 1.2

2000년 고령화사회

(노인인구 7%)

2019년 고령사회

(노인인구 14%)

2026년 초고령사회

(노인인구 20%)

2050년 세계2위의 노인국가

정부의 경제철학

- 747공약 -> 474공약
- 1. 애당초 불가능 2. 세계 경제위기
- -> '줄푸세' 공약의 등장
- 줄푸세=Mellon의 5대 도그마의 한국판
- -> 결과는 82조원 감세, 22조원 4대강 사업
- 세수 규모 21%->19%로 후퇴, 국가부채 누적, 재정건전성 파괴, 재벌 세상
- 규제완화, '전봇대 뽑기' (이명박)
- -> "규제는 암덩어리" (박근혜)
-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세계은행) 4위

불평등과 성장: 최근 경향

OECD 불평등 3대 보고서:

1. *Growing Unequal*, 2008
2.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2011
3.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2015

불평등 3대 요인: 기술, 세계화, 제도

제도학과 강세, Larry Bartels(2008), Paul Krugman(2007), Robert Reich(2008), Joseph Stiglitz(2012)

불평등과 성장: 최근 경향

- 최근 보수적 기관의 대명사 IMF조차 지나친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
- 불평등 축소 재분배 정책은 성장 저해 아니라 촉진 (A. Okun, Big Trade-Off 상반)(Ostry et al, 2014).
-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연설.
- 성장과 분배를 보는 시각이 상전벽해가 되다.
- 이런 분위기에 둔감한 것이 한국 경제학계.
- 학자들 복지, 분배 개선 방해, 성장만능주의 전파
- 성장지상주의 극복 -> 성장과 분배의 동행
- 시장만능주의 극복 -> 시장과 국가의 조화

결론: 경제 패러다임 전환

낙수효과(trick-down)는 무망

창조경제? 규제완화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포용적 성장(분배 -> 성장 -> 고용)

부채의존적, 수출주도적 성장 ->

임금(소득) 주도적 성장 = 포용적 성장

(최근 혁신성장 : 소득주도성장 논쟁

참여정부 때 성장 : 분배 논쟁의 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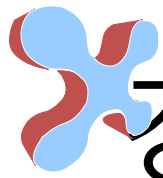
포용적 성장 = 경제민주화 + 복지국가

New Deal 필요, 지난 100년 개혁 거의 없었다

왜 경제민주화 + 복지국가?

- 시대적 흐름

1. 관치경제(국가독재 모델) 1961-현재
2. 시장독재(시장만능주의) 1998-현재
3. 제3의 대안은? -> 경제민주화 + 복지국가
= 포용적 성장(New Deal)



경제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

Germany

Sweden

Japan

Korea

US, UK

사회적 대화

Corporatism, 사회적 대화 Social Dialogue

1. 스웨덴, Saltsjobaden 협약, 1938
2. 네덜란드 'Polder 모델': 루버스, 빔 쿡
Wassenaar Accord, 1982
3. 아일랜드 모델: 1987 이후 3년마다

사회적 대화 통해 재벌개혁, 복지증세, 조세개혁, 비정규직, 노동자 참여 등 일괄 타결.

- 토지 보유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현 정부, 증세 5.5조(5 billion \$)로는 부족

Dublin Spire, 2002



경청 감사

이 정 우
joulee@knu.ac.kr